

보도자료

배포일 : 2023.2.28.(화)



□ 국민소통위원회 : ☎ 02-2630-0050 ☎ 02-2630-7094 □ 담당 : 이주형 부장

민주당, 채널A 보도 방심위 제소

- 팩트체크 없는 '대담·토론프로그램' 계속 제소할 것 -

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이재명 당 대표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보낸 <채널A 뉴스 TOP10>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했다.

<채널A 뉴스 TOP10>은 2월 24일, ['대백정' 이 이재명 잡는다?... '정자동 호텔' 또다 른 압초'] 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진행했다.

이 프로그램은 제목부터 불공하며 편파적인 데다 선정적이기까지 하다. '대백정' 이라는 표현의 선정성도 문제지만 "이재명 잡는다" 라는 부분은 이 대표를 불법행위자로 단정하는 느낌마저 준다.

패널의 사실과 다른 발언은 더 문제다. 패널로 출연한 이현중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"정자동 H호텔의 임대료는 시 조례에 따르면 5%를 받게 되어있다." "이 호텔의 경우는 1.5%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." "시가 가지고 있는 5%라는 조례에 왜 어긋나는 것이지?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왜 그러면 이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지?" 라고 언급했다.

이현중 문화일보 논설위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. 우선 '정자동 호텔의 임대료가 시 조례에 따르면 5%다' 라는 전제부터 틀렸다. 그러므로 "1.5% 임대료 특혜" 라는 그의 주장은 명백한 가짜 뉴스이다.

[외국인 투자촉진법]과 당시 [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7조]에 따르면, 외국인 투자회

사의 경우 임대료 ‘1% 이상’ 이면 합법이다. 그러므로 이재명 전 시장은 특혜를 준 일이 없다. 그러나 당일 채널A 사회자는 이현종 위원의 발언을 팩트체크 하기는커녕 사실상 동조하는 뉘앙스를 풍기며 이 대표에 대한 의혹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.

민주당 국민소통위는 “패널의 허위사실 유포는 그 자질을 의심하게 만든다” 며 “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패널은 퇴출돼야 한다” 고 주장했다. 소통위는 또 “패널이 허위사실로 특정인을 공격할 때 제지하고 사실을 바로잡는 것은 사회자의 의무” 라며 “채널A 사회자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역할조차 하지 않았다.” 고 지적했다. 국민소통위는 이러한 채널A의 보도 행태가 “이재명 대표에게 불법·특혜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정치공세에 방송이 앞장서는 것에 다름 아니다” 라며 앞으로도 “방송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들의 무책임한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 방심위 제소 등 대응할 것” 이라고 밝혔다.

※ 관련 방송심의 규정

- 제9조(공정성)
 -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.

- 제13조(대담·토론프로그램 등)
 - ① 대담·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·균형성·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 - ②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.
 - ③ 토론프로그램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⑤ 대담·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(자연인과 법인,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제14조(객관성)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,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.